

광남시론

위인백

(사) 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함으로써 경제·사회·문화·정치적 측면에서 선진국의 강소대국 문턱에 서 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정상회의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의 숨 가쁜 일정들을 소화하며 기술·투자 협력의 새로운 교차점을 발굴했던 APEC 일정이 종료됐다.

성공리에 마친 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서 개최한 의미도 컸지만, 이를 준비하는 과정과 결과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들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APEC 서밋에 앞서 우리를 옥죄어오던 미국의 관세협정이 타결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일조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공개 발언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의제로 꺼내 승인을 얻어내면서 오래된 안보 관련 숙원도 풀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문개버린 채 일방적으로 요구한 트럼프 발 관세 강화로 숨 가쁘게 달려오다 천만 다행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타결되기까지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경관 산업통상부장관, 그리고 위성락 안보실장의 노력과 능력

우린 강소대국의 기로에 서 있다

이 돋보였음을 국민은 알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도한 21개국 APEC 정상회의 자체도 주목받는 행사지만, 미국·중국·일본 등 여러 나라와 양자 회담도 이목을 끌었으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나왔다.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군사력, 그리고 국민의 단합된 힘이 없으면 이리저리 당해는 역사를 수없이 봐왔다. 우리나라도 5000년이란 유구한 역사에서 과연 어떤 나라로 지탱했는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신냉전 시대에도 구냉전과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가 충돌한다. 구냉전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이었다면, 신냉전은 자유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의 대결이다. 우리는 국력의 한계와 지정학적으로 독자적인 자립이 어려우므로 우방과의 동맹과 실리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다.

미국과 대서양 및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은 개인의 권리가 국가의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체제이다. 반면 자유민주주의가 국가를 허약하게 만든다고 믿는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1인 통치의 독재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민주주의 진영이 현재의 주요 7개국(G7)에 한국과 호주를 포함시켜 G9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한국은 첨단 반도체와 배터리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호주는 세계 1위 리튬 생산국이자 세계 4위의 우라늄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진영의 경제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그렇지만,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G9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국제무대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한국은 미국과 G7과 같은 편에 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 및 대중국 투자를 계속 유지해야 하며 지정학적 및 지정학적 여건상 이를 미국이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민감한 첨단 기술 분야 외에 다른 부문에서 한국이 중국과 좋은 경제적 관계를 단절해야 할 까닭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기회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의 진위 쿠데타를 막아낸 국민이 없었다면, 독선과 독주, 무소불위의 그들만의 정부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윤석열의 진위 쿠데타는 민주주의 소중함과 국민의 역할을 새삼 일깨워줬으며, 국제관계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정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았겠다 싶어서 천운으로 우리의 국운은 아직 쇠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가진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난 APEC 최약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높이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이제는 정치권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뒤흔들기. 망국의 내란 가담자들을 하루속히 처단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는 진위 쿠데타에 동조한 국회당과 추종 세력부터 개과천선이 있어야 하지만, 기대가 어려우므로 민주 시민정신을 발휘한 국민이 끝까지 용납하지 않아야,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할 글로벌리더의 강소대국이 될 것이다.

기고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



소중한 숲 산불예방으로 지키자

특히 3월 22일은 보성과 진도에서 동시에 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날 전국에서도 총 31건의 산불이 동시에 발생했다. 산림청 진화헬기는 영남권에 모두 투입되어 지원할 수 있는 헬기가 없는 상황에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산불상황실에서는 4건의 산불규모와 확산 속도 그리고 풍속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장소별 진화헬기 규모를 판단해 분산 투입한 결과 6시간 만에 모두 완전할 수 있었다.

예써 가운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전남도 산불상황실의 공중진화 지휘와 시군 지상진화대의 입체적 공조 체계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고 회상한다. 피해를 입은 산림자원을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4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산불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 내기 위해서는 예방과 대응이 절실하다.

가을철 산불발생 위험도도 올봄과 같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불로부터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예방과 대응에 있어 산림부서뿐만 아니라 주민대피, 시설물 및 문화재 보호, 사회복지시설 분야의 대비책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 산불피해 최소화화 위해서는 신개념 산불방지 대책도 필요하다.

첫째, 산림인접지에 대한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 산림인접지 화재가 산불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부서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산불이 도상지로 확산되지 않도록 산림과의 이격 거리를 확보하고 소화시설 등을 확대하는 마을단위 예방체계 또한 미리 구축해야 한다.

둘째, 산불에 대한 주민 관심 제고 및 경각심 고취가 필요하다. 산불발생 시 원인과 산불진화상황 그리고 가해자 검거 및 처벌 결과를 상세히 보도하고 벌칙과 과태료를 상향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셋째, 산불감시 및 전파체계 개선이다. 행정기관 인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불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이동장 등 주민 참여 산불감시를 추진하고 인력에 의한 감시가 어려운 지역은 CCTV, AI, 드론 등을 활용한 지상·공중의 입체적 산불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강력한 초동진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신고·접수로부터 물 투하까지 30분 이내로 설정하여 신속한 초동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용 진화헬기와 고도화된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데이트어 기반한 신 산불진화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대형·야간·협준지 산불 대응에 필수적인 진화인력 또한 보강해야 한다.

다섯째, 주민대피체계 개선이다. 초고속 산불에 대비 시군 경계를 넘는 주민대피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요양시설 등 대피 취약시설을 사전에 파악해 대피계획의 실효성 또한 확보해야 한다.

산불재난은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제는 전 국민이 산불예방을 위해 나서야 된다. 수십 년간 가꾸어온 산림과 소중한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산불예방 활동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취재수첩

반성 없는 용서는 없다

윤용성

사회부 기자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의 내란 사태로 민주주의의 겨울을 맞이한 지 1년여가 다 돼간다.

시민들은 1980년 신군부의 쿠데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광주 정신으로 다시 한 번 이를 앞장서 수호했다.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에 대한 사과는 어디에도 없었고, 5·18을 경험했던 이

들에게 12월3일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5·18의 존재와 기억은 엄연하지만 여전히 가해자의 사죄 없는 태도는 역사의 아픔에 포개져 더 혼란스럽다. 하지만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내란공범, 내란정당, 내란 부역자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6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지만,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제대로 참배하지 못했다.

특히 장 대표는 윤석열을 면회한 후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자’고 선포했고, 장외 집회에서 ‘이재명 정권을 끝내자’며 대선 불복·내란 비호 의지를 꺾지 않았다.

이런 진정성 없는 민주묘지 방문은 광주 시민들의

‘내란용호 장동혁’, ‘오월영령 참배 자적 없다’, ‘사죄부터 하라’는 목소리에 끝내 무산됐다.

앞서 지난 5월에도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내란 동조 세력’이란 시민들의 반발에 되돌아간 바 있다.

일각에서는 거센 저지에 돌아설 수밖에 없는 장면을 연출해 극우세력의 지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잘못을 알고 있으면 사과하는 것이 당연하고, 잘못을 모르다라고 지적당하면 사과하는 것이 이치다.

시간이 흘렀다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장 대표를 비롯한 이들이 앞서 어떤 반성과 조치 없이 광주를 찾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을 두 번 모욕하는 일이다.

반성 없는 용서는 있을 수 없다.

스스로 반성 없이 상대의 반성을 요구하거나 용서를 바라는 것은 마초물 없이 펄펄질을 하는 것과 같다.

사설

KTX 호남선 증편, 불평등 개선 계기돼야

KTX(Korea Train eXpress) 호남선이 오는 17일부터 하루 두 차례 증편 운행된다. 201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10년만에 이뤄진 첫 증편이다.

한국철도공사가 기존 용산~익산 구간을 운행하던 KTX-산천 열차 4편 중 상·하행 각 1편씩 총 2편을 광주송정역까지 연장 운행기로 한 것이다.

KTX-산천 열차가 1편당 379석 규모라는 점에서 이번 증편으로 하루 758석의 좌석을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연장대상은 용산에서 밤 9시9분 출발해 밤 11시44분에 광주송정역에 도착하는 야간 용산발 열차와 광주송정에서 오전 5시52분 출발해 용산에 오전 8시57분 도착하는 새벽 용산행 열차다. 서울로 오고가는 선택지가 넓어진 것이다.

이번 증편에는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공이 컸다.

사실 KTX 호남선은 2005년 분기역이 총복 오승으로 결정되면서 지역민들은 시간과 요금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여기에 경부선 개통보다 11년 늦은 2015년에야 개통된데다 배차·증편횟수, 차량규모 등 모든 면에서 경부선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지역차별의 상징’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돼 왔다.

이에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시의회 등은 지난 9월 광주송정역에서 ‘호남선 KTX 증편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와 코레일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당시 이들은 “경부선은 2015년 이후 주말 기준 21편이 늘어난 반면 호남선은 단 1편에 그쳤다”며 “이용객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도 호남선은 그대로인데 경부선은 주말에 4회 증편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 갑)도 철도공사와 수개월간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호남선 좌석난 해법을 촉구해 이같은 결실을 거뒀다.

문제는 이같은 증편이 KTX ‘승차권 전쟁’ 해소에 다소나마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새벽 상행과 심야 하행에 집중돼 있어 출퇴근·주말시간대 좌석난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이번 증편을 계기로 삼아 지금도 산적한 KTX 호남선의 불평등 구조를 앞으로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

‘실종정보문자’ 실종자 조기발견 큰 역할

경찰이 운영하는 ‘실종정보문자’가 실종자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실종아동법 개정에 따라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시민 제보를 통해 실종자 발견을 신속히 유도하고, 실종자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즉,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 실종됐을 때 실종자 정보를 재난문자처럼 지역 주민에게 신속히 알리는 문자 안내를 말한다.

보호자가 경보 발령과 정보 공개에 동의하고, 대상자가 상습 가출 전력이 없으며, 생명이나 신체 피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로 제한해 전송한다고 한다.

이 문자에는 실종자의 간략한 신상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문자 하단에는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블로그 링크가 함께 제공돼 있다.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실종자의 마지막 촬영 사진과 함께 연령, 발생 일시, 인상착의, 담당 수사관 연락처 등 구체적인 정보가 게시돼 있다.

시행 3년째인 이 제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더해지면서 당초 취지대로 실종자 발견율을 높이고 구조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지역 실종 사건 신고가 2023년 1462건, 2024년 1708건, 올해 10월 현재 1334건 등 매년 1500여건 가까이 접수되면서 실종정보 문자 발송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03건, 2024년 91건, 올해 71건을 발송했는데 이중 2023년 60건, 2024년 37건, 올해 14건이 시민제보를 통해 실종자를 발견했다.

전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실종사건신고는 2023년 1160건, 2024년 1076건, 올해 10월 현재 765건이 접수돼 이중 2023년 67건, 2024년 69건, 올해 74건의 실종정보 문자를 보냈다. 그 결과 2023년 18건, 2024년 18건, 올해 10건 등이 시민제보로 실종자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또 제도 시행후 실종자 발견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 4시간 36분으로, 시행 전 34시간보다 무려 7.4배나 단축시켰다. 경보문자 발송 후 30분~3시간 내 실종자가 발견된 경우가 대다수일 정도로 실효성이 높다.

하지만 정신병력이 없는 일반 성인 등은 실종정보문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사전지문등록제 등 추가 예방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고 있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부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는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